

■ 美大選, 실리콘밸리의 표심

□ 캘리포니아 - 전통적인 민주당 아성

- 캘리포니아주, 특히 실리콘밸리가 속해 있는 베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임.
- 2000년 대선에서 실리콘밸리 CEO들은 정보고속도로를 주창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에게 선거자금과 표를 몰아 주었음.
-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도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베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그레그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에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통적인 '민주당' 텃밭임을 보여주었음.

□ IT분야 공약 - 케리 진영 한발 앞서

- 양 후보진영은 IT산업의 중요성과 지원책을 약속하고 특히 고속인터넷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, 케리 후보측이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케리 후보측은 “기술혁명이 21세기 경제의 근간이며,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”이라며 초고속 인터넷 기술과 과학·수학, 연구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 계획을 밝혔음.
- IT분야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공약을 하였음.
 - 차세대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기업에게 20%의 세금 감면 혜택
 -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
 -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의 연구 자금 증액
 -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
 - 과학 및 엔지니어 분야 졸업생 다수 배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-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약 30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, 이를 TV 주파수 경매를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 밝혔음.
- 이외에도 첨단 기술의 대외유출을 막기 위해 고성능 하드웨어 컴퓨터에 국한되어 있는 수출제한을 '무기제작용 소프트웨어'로 확대, '바이오 테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', '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강화'를 주장하였음.
- 한편, 부시 대통령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오는 2007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공언하였음.
 - 고속인터넷 확대를 통해 교육, 헬스케어, 비즈니스 분야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며, 정부 소유 일부 무선 주파수를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해주도록 요청하였음.
 - 또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료에 부과하는 소비자 세금의 영구적 금지를 의회에 촉구하였음.
 - 수소연료 기술 실용화, 수소연료 차 개발 및 10년 안에 모든 환자기록을 전산화하는 전자의료, 기록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음.

□ 해외 아웃소싱 - 최대 쟁점으로 부각

- 이라크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IT분야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커다란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가운데 ‘해외 아웃소싱’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음.
- 케리 후보는 안정적 고용성장을 위해 ‘해외 아웃소싱’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음.
 - “일 자리를 외국에 보내는 CEO는 ‘베네딕트 아놀드(반역자)와 같다’”라고 반감을 나타내면서 “일 자리를 외국에 보내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”고 공언하였음.
 - 기업이 일 자리를 해외로 옮길 경우 적어도 3개월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, 콜센터의 실제 위치를 밝히도록 명시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.
 - 또한 고용비자(H-1B)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이 과거 미국인이 수행해온 일 자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법안에도 지지하고 있음.
- 반면 부시 대통령은 ‘해외 아웃소싱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으로써, 케리 후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음.
 - 해외 콜센터 등 IT부문 일자리가 저임금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, 궁극적으로 미국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.
 -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신규고용창출이 -1.2%인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후버 대통령 이후 최초로 재임중 일자리가 줄어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, 공화당 전통의 親기업적 성향을 보였음.

□ 실리콘밸리 표심 - IT정책의 절대기준 약화속 양 후보 백중세

- 2개월여의 대선을 앞두고 실리콘밸리 CEO들은 속속 지지후보를 발표하고 있으나,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양 후보에 대한 지지가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케리 후보가 감세정책과 해외 아웃소싱에 반대하고, 외국인의 미국내 취업을 제한하는 등 반기업·親노동자 성향을 나타냄에 따라 실리콘 밸리의 표심은 오히려 공화당 쪽에 기울어 가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음.
-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IT기업의 CEO들의 정치자금 기부현황을 보면 부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 - 빌 게이츠 MS 회장, 스티브 발머 MS CEO, 사무엘 팔미사노 IBM 회장, 칼리 피오리나 HP 회장, 크레이그 배럿 인텔 CEO, 존 체임버스 시스코 CEO, 마이클 델 델 회장, 맥 휘드먼 이베이 CEO, 스티브 케이스 AOL 창업자 등 실리콘 밸리를 대표하는 인물이 개인기부한도인 2천 달러를 부시 진영에 기부하였음.
 - 케리 후보에게는 테트 화이트 前 게이트웨이 CEO, 앤디그로부 인텔 회장, 존 톰슨 시만텍 CEO 등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 -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, 소캇 맥닐리 선마이크로시스템스 CEO, 스티브 잡스 애플 CEO, 그래이그 콘웨이 피플소프트 CEO 등을 정치자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금번 대선이 과거와는 달리 IT분야를 비롯 ‘경제분야’에서의 정책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 속에서, 실리콘밸리의 CEO들은 과거의 IT정책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나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정치, 사회 등 여타 이슈로 후보를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졌음.

- 부시 대통령에 개인 기부금 한도액을 기부한 HP의 CEO 칼리 피오리나는 부시 행정부의 IT정책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지지와 IT 정책과는 무관함을 표시하였음.
- 최근 케리 후보의 경제 자문역으로 발탁된 애플컴퓨터 CEO 스티브 잡스도 IT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음.

(문의처 : 샌프란시스코무역관 김승욱 swkim@kotra.or.kr)